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與 “국민에 사죄하라” 野 “법원 판결에 존중”

‘국정농단’ 朴, 징역 20년 판결 반응
민주당 “朴, 민주주의에 오점 남겨
국민의힘, 역사적 공동책임 명심”
국민의힘 “불행한 역사 반복 안돼
민주주의·법질서 위해 노력할 것”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달랐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라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경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차분하게 반응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을 겨냥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엎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에 “사면 논란에 중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논평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라는 비선 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생멧돼지 ASF 전국 확산 조짐... 방역 강화

중수본, 12개 시군서 941건 발생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생지역은 화천(343건), 연천(314건), 파주(98건), 인제(42건), 철원·파주(34건), 양구(33건) 순으로 많다. 특히 야생멧돼지 ASF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8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방역울타리를 넘어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하지 않은 사육돼지 감염 가능성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멧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총 941건이

/세종=한용수 기자

내달 백신접종... 11월엔 ‘집단 면역체계’

민주당-정부, 백신·치료제 무상공급 5600만명분 확보... 물량 문제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무상으로 공급할 뜻도 재확인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오는 2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는 시기는 올해 3분기 내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1

월까지 집단 면역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집단 면역 체계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만큼, 당·정이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으로 방역에 집중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았다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오는 2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물량 확보도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백신은 중앙에서 의료기관에 보내는 체계를 구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종류와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물량을 보낼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본부 방역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56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라며 “추가로 백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양은 더 늘어날 것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데 양의 부족함은 없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현행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일부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방침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작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김성주 본부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부분적으로 허용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관련 논란과 관련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는 게 대개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김 본부장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와 관련 “방역 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정점)를 찍었던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완화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상황도 전했다.

/최영훈 기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고용부, 25일부터 접수... 내달 지급

공공 돌봄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25일 9시부터 내달 5일 6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 맞춤형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 돌봄서비스 7종

과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공고일(1월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와 함께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한시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22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2020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중소기업창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으므로 이 지원대상에선 제외된다.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심사 완료 후 2월말에 일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식 출범

수소산업 중심 혁신성장거점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수소산업 중심 혁신성장 거점으로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이 14일 이 같은 비전을 선포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작년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밀 확보와 청장공모 등 준비를 마치고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의 강점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과 수소분야 융·복합을 통해 수소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해달

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2.0’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해 외부기업뿐 아니라 국내 입주기업에게도 조성비가 이하 분양, 수익계약 허용,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진입도로, 용수공급 시설 등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총 사업비 42억원 규모의 입주기업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신산업 투자가 촉진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도록 규제혁신 과제 및 참여기업 발굴, 실증특례 컨설팅 지원 등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특히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수소선도 도시와 관련해 올해 2월부터 ‘수소법’ 시행에 맞춰 수소전문기업 지정, 그린수소 실증 확대 등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